

『기본강의 헌법』(전정4판, 2017년판, 1쇄) 정오표 최종본(2017. 8. 14. 작성)

- ※ 이후 발견된 정오사항은 12월경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 저자 金柳香

★ 제105면 박스 ‘4·19 민주이념의 계승’ 우측 내용 수정

- ■ 제3공(1962년)헌법에서 ‘4·19의거~에 입각하여’라고 규정. 제5공(1980년)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현행(1987년)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처음 명시.

★ 제182면 I. 목차 본문 8줄

- ~ 정치적·구권적·사회권적 기본권 → ~ 정치적·청구권적·사회권적 기본권

★ 제400면 (가) 목차 2문장 보완

-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의미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 제427면 첫 박스판례 우측 주문 수정

- ▶위헌 → ▶기각

★ 제680면 네 번째 박스판례 제목 변경

- 학교환경정확구역 안에서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금지

★ 제737면 본문 2문단 1줄 변경

- 그런데 개별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떠한 예외도~

★ 제822면 ‘(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부분 맨 뒤에 추가

-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라는 판시도 하였다(2009.3.26. 2007헌마359).

- 공 백 -

★ 제1027면 제59조 2호, 3호 본문 ‘선거일이 아닌 때에’ 삭제됨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문 동일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문 동일

★ 제1028면 제60조의3 제2항 3호 개정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개정 2017.2.8.>

★ 제1028면 본문 2문단 3줄 수정

- (선거일 제외) → (선거일 포함)

★ 제1135면 제53조 제1항 개정

제53조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6.12.16]

★ 제1136면 B. ⑧항 수정

- ⑧ 정보위원회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에 월 1회 이상 개최한다(제53조 제1항).

★ 제1137면 E목차 4줄 수정

- 그리고 폐회중에는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 그리고 3월·5월(폐회중에 한정)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 제1140면 박스 ‘공개여부’ - ‘특별위원회’ - ‘상설’ 부분 수정

- 공개원칙(윤리위는 비공개) → 공개원칙(윤리위 징계 비공개원칙)

- 공 백 -

★ 제1144면 제5조의2 제2항 개정

제5조의2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등]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6.12.16.>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 중 1주는 제1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행한다.

★ 제1145면 (가) 집회 및 회기 본문 6~7줄 수정

- 둘째, 국회의 상시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는 2월·4월·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이때에 집회하는 임시회는 회기가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고정되어 있다.

★ 제1231면 본문 4줄 수정

- (국가정보원장 등에~) →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 제1253면 제26조 제2항 개정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단서신설 2016.12.16.>

★ 제1254면 A. 국회의 동의절차 본문 3줄 뒤에 추가

- ~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2016.12.16. 국회법은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제1336면 2. 목차 본문 마지막줄 수정

- ~ 이를 통보한다. → ~ 이를 통보할 수 있다.

- 공 백 -

★ 제1372면 본문 4줄 개정

- 행정법원의 6종 → 행정법원·회생법원의 7종

★ 제1375면 제28조 제1호 개정

제28조 (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3.1]]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제1377면

- 6. 회생법원

법원조직법

제40조의7 (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3.1]]

★ 제1377면 ‘6. 특별법원’ → ‘7. 특별법원’

★ 제1437면 4.항 본문 2~6줄 내용 변경

- “법은 이에 관해 ~ 견해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은 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 ‘합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에 순차로,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견해를 가진 수를 더하여 과반수에 이르게 된 때의 견해를 그 합의체의 견해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 등 변형결정 포함)결정 등은 재판관 6인에 이르러야 한다.

- 공 백 -

★ 제1479면 3번째 박스판례 제목

-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청구

★ 제1517면 2문단 2줄 변경

- 당해사건에도 → 당해사건이나 병행사건의 경우에도

★ 제1517면 2번째 박스판례 제목

-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불합격처분 →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이루어진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

★ 제1528면 마지막 박스판례 위치 이동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판례 제1520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판례로 이동요함

★ 제1538면 2번째 박스판례 번호 수정

- (1993.7.29. 89헌마123) → (2016.10.27. 2014헌마1037)

★ 제1577면 목차 및 내용 변경

- ‘C. 보충성의 원칙’ → ‘B. 보충성의 원칙’
- ‘B.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 → ‘(나)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
‘(나)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 내용 1~2줄 수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야 한다.’ → ‘행정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다.’
- ‘(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한 판례’ → ‘(다)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한 판례’

정부조직법 [개정 2017.7.26.]

◇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나.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 공 백 -

◇ 교재수정 <2017.7.26. 개정된 정부조직법, 국회법 반영>

★ 제1135면 박스 5번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각 변경, 박스 9번째 ‘안전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로, ‘국민안전처’ 삭제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로 각 변경.

★ 제1136면 박스 2번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우측에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 제1259면 제26조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 제1260면 박스 ‘우리 역대 헌법상 권한대행’ 중 4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제1332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⑤ 삭제

★ 제1335면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본문 뒤에 아래 내용 추가 +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전체 삭제

– 그러나 2017.7.26. 개정 정부조직법에서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였다.

★ 제1337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② 삭제

★ 제1338면 본문 1~2줄 수정

– 2017.7.26. 개정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에는 행정각부의 장을 겸한 국무위원 18명이 있다.